

	<h1>보도자료</h1>	2023. 5. 21.(일)
담당 : 자치분권국 / 02-6788-3216		

##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규탄 공동대응 현황

‘윤석열 정부의 대일굴욕외교가 국민의 건강과 밥상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’

- ☐ 지난해 일본정부의 ‘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’와 최근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서 ‘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 방문(5.21.)’이 결정되었다. 이는 우리국민의 수산물 먹거리 안전과 소비위축으로 서민경제와 해양환경에 중대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.
- ☐ 이에, 참총은지방정부위원회는 방사성 오염수 방출결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고,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와 뜻을 모아 ‘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규탄 공동대응(3.30)’ 사항으로 함께 동참할 것을 제안하였다.
- 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을 통한 구체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사안으로, 당 소속 지방정부·지방의회는 윤석열 정부에 대국민 저지의사를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실효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. 이에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정부·지방의회 현황을 공개하고자 한다.
- ☐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차원에서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공동대응을 진행한 대표적인 지방의회로

### ▲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

서울 서대문구, 양천구의회 / 경기 남양주시의회 외 7곳의 지방의회 진행하였으며,

### ▲ 철회 및 대응촉구 결의안 채택

서울 성동구, 강서구 / 부산 동래구, 남구, 기장군, 연제구, 사상구 / 인천 남동구 외 24곳의 지방의회에서 결의안 채택을 진행하였으며,

### ▲ 농수산물 수입 반대 규탄대회

서울 양천구, 영등포구, 당 소속 중구의원 / 경기 남양주시 외 3곳의 지방의회에서 공동 대응하였다. 그 밖의 대응방법으로 1인 시위와 논평, 5분 발언,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와 농수산물 수입 반대 규탄 공동대응을 진행하였다.

- 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현장시찰단 파견 강행은 우리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과학적인 철저한 검증으로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.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오염수 현장시찰 강행은 중단되어야 한다. 또한 해양생태계 보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환경 보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오염수 해양방류는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.
- ☐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와 지방정부의회 및 국민과 함께 정부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속한 대안 마련촉구와 본격적인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행동으로 총력을 다하여 해양방류 철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.

#【붙임】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공동대응 현황

2023년 5월 21일(일)



참총은지방정부위원회

[붙임]

□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공동대응 현황

대응	진행	지방정부 / 지방의회
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	시행 (10)	- (서울) 서대문구의회(4.4), 양천구의회(4.27) - (대구) 민주당 소속 대구 지방의원(4.26) - (광주) 민주당 소속 광주 지방의원(4.12) - (울산) 민주당 소속 울산 지방의원(5.20) - (경기) 남양주시의회(4.12) - (전북) 정읍시의회(4.18) - (경남) 창원시의회(4.10), 산청군의회(5.15) - (제주) 제주도의회(4.20)
	예정 (4)	- (서울) 영등포구의회(5월 중) - (울산) 울산시당(5.29), 동구의회(6월 중), 울주군의회(6월 중)
철회 및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	시행 (32)	- (서울) 성동구의회(4.27), 강서구의회(4.21) - (부산) 동래구의회(4.26), 남구의회(5.9), 기장군의회(4.21), 연제구의회(5.1), 사상구의회(5.15) - (인천) 남동구의회(4.18) - (대전) 서구의회(3.30) - (울산) 북구의회(5.4), 중구의회(5.17), 동구의회(5.18) - (충남) 서산시의회(3.13), 서천군의회(3.23) - (전북) 군산시의회(4.20), 남원시의회(4.18), 장수군의회 (4.11), 임실군의회(4.16), 순창군의회(4.6), 고창군의회(4.13), 부안군의회(4.24) - (전남) 전남도의회(4.4), 전남사군의회의장협의회(4.13), 나주시의회(4.24), 광양시의회(4.7), 장흥군의회(4.9), 진도군의회(3.27), 영광군의회(4.18) - (경북) 안동시의회(4.17) - (경남) 통영시의회(3.15), 사천시의회(4.14), 거제시의회(4.28)
	시행 시도 (5)	- (서울) 양천구의회(5.4) - (부산) 부산진구의회(4.21), 북구의회(5.9), 금정구의회(4.20), 수영구의회(5.10)
	예정 (12)	- (서울) 영등포구의회(5월 중) - (부산) 중구의회(6월), 서구의회(미정), 동구의회(미정), 영도구의회(5.23), 강서구의회(5.27) - (울산) 남구의회(6월 중) - (충남) 아산시의회(미정), 태안군의회(5월 중) - (경남) 진주시의회(5월 중), 김해시의회(6월 중), 양산시의회(6월 중)
방사능	시행	- (서울) 성동구청(2.24), 양천구의회(5.12)

측정기 지원  (조례 제정)	(2)	
	예정 (1)	- (서울) 영등포구의회(6월 중)
5분 발언	시행 (3)	- (충남) 충남도의회(4.6), 당진시의회(5.3) - (경남) 통영시의회(3.15)
	예정 (1)	- (인천) 연수구의회(6월 중)
규탄대회	시행 (7)	- (서울) 민주당 소속 서울 중구의원(4.28), 양천구의회(4.27, 5.4) - (광주) 민주당 소속 광주 지방의원(4.12) - (울산) 민주당 소속 울산 지방의원(5.20) - (경기) 남양주시의회(4.12) - (충남) 부여군의회(4.18) - (전남) 여수시의회(3.21)
	시행 시도 (1)	- (대전) 대덕구의회(4.27 ~ 4.29)
	예정 (2)	- (서울) 영등포구의회(5월 중) - (울산) 울산시당(5.29)
1인 시위	시행 (1)	- (부산) 영도구의회(5.19 까지)
논평	시행 (1)	- (대구) 대구시당(4.3)
중앙정부 피해 대책 마련 건의	시행 (1)	- (제주) 제주도청(4.21)
정책토론회	시행 (1)	- (제주) 제주도의회(3.20)